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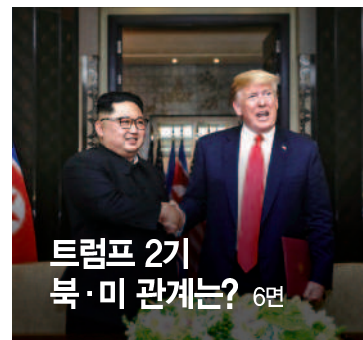
팔레스타인 문제가
미국 대선에 미친 영향
16, 15면

2024년
미국 대선
2~6, 8~9면

독일, 극우 부상 속에
연정 붕괴
10면

국제 극우파들의
전략
12~13면

《강탈국가 이스라엘》
추천 서평
14면



트럼프의

재등장에도

모순들은

더 커질 것이다

관련 기사 2~6, 8~9면



경제 위기, 민주당, 미국 선거

트럼프는 자신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황금기”를 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주당은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지도 않아 놓고 미국이 이미 위대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자신이 버려지고 잊혀지고 조롱거리가 됐다고 느끼는 이들의 억압심정이라는 진실된 감정에 올라탄다.

노동계급은 고통받고 있으며 미국이 바뀌기를 간절히 바란다. 미국 경제 상황을 대략 살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알 수 있다.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유권자 열에 여덟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작동 방식이 적어도 “크게 바뀌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유권자 넷 중 하나는 “완전히 전복”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정부가 복지로 지급하는 금액은 줄어들었다. 푸드뱅크(빈곤층 대상 식료품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구가 치솟았고, 노숙인 수가 기록을 경신했다.

기초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이 2020년 32퍼센트에서 2024년 39퍼센트로 늘었다.

이는 현재 미국 전체 인구 3억 3000만 명 중 1억 3000만 명에 해당한다. 미국 성인 60퍼센트가 지난해 가처분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다. 그리고 58퍼센트가 매달 받는 월급으로 한 달을 간신히 버티며 살아간다고 한다. 비교해 보자면, 영국인의 경우 31퍼센트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리고 미국의 생활 속에는 오래 전부터 고착화된 구조적 비용 문제가 있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포기

의료 서비스를 생각해 보자. 미국의 민영화된 의료 체계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필수 의료 서비스에 엄청난 비용을 부담한다.

미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5명 중 2명 가까이가 비용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대개 파산하느냐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느냐 하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식료품을 살 수 없어 고통받는 사람



늘어나는 노숙인 2023년 2월 워싱턴DC의 공원에서 경찰이 노숙인들의 텐트를 철거하고 있다

들의 수가 급증해 2024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선 단체들은 식료품 가격이 치솟고 팬데믹 시기에 제공되던 지원이 점차 사라지고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까닭이라고 그 원인을 설명한다.

거의 4400만 명이 돈이 부족하고 다른 방법도 없어 필요한 식량을 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 농무부가 최근 보고서에서 밝혔듯 이 중 1300만 명이 아동이다. 또한 노숙자가 기록적으로 늘었는데, 놀랍지 않게도 이는 사람들이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잦아진 것과 맞물려 있다.

2022년에는 소득의 30퍼센트 이상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2240만 명에 이르러 이 또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은 해마다 수만 달러를 육아 비용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처지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으며 신용카드 빚을 점점 더 키우고 있다. 미국인 3분의 1 이상이 비상금보다 신용카드 빚이 더 많다고 말한다. 2023년 4사분기에는 신용카드 빚이 1조 1000억 달러(약 1300조 원)를 넘어서 22년 만에 최대로 치솟았다.

현재 미국인 2100만 명이 공과금을 제때 내지 못하고 있으며, 2500만 명이 신용카드 빚이나 개인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연체율이 높은 것은 2007~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치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한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불평등이 건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197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 최대 기업 CEO들의 소득은 1460퍼센트나 뛰어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고작 18.1퍼센트 올랐다. 이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는지 실감하려면, 2021년 기준으로 CEO 평균 소득이 노동자 평균 소득보다 399배나 많았다는 점을 보면 된다.

기업주와 부자

요컨대 미국 경제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4년 동안 문제를 가리려 고만 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특징은 국가가 앞장서서 세금 혜택, 직접 보조금, 관세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해서 생산을 장려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가 실제로 한 일은 담대한 공약에 턱없이 못 미쳤다.

바이든은 2021년 ‘미국 구조 계획법’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1400달러(약 150만 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했다.

실업 보험을 확대하고 자녀 세액 공제와 집세 지원을 늘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한시적 조치였고(임시적 성격의 사회적 안전망이었다) 팬데믹이 끝

나면서 함께 사라졌다. 심각한 불평등은 그대로 남았다.

이후 2021년에는 교통과 기반 시설 프로젝트에 1조 2000억 달러(약 1400조 원)를 할당한 ‘기반 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을 제정했다.

2022년에 제정된 민주당의 대표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3900억 달러(약 500조 원)도에 이르는 기후 관련 지출을 비롯한 녹색 에너지 투자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 재정은 10년에 걸쳐 사용되는 것이다.

그 중 대부분은 청정 에너지와 친환경 제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대기업에 세금 공제와 보조금을 주는 형태였다.

정책의 목표가 미국 자본주의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주와 부자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국가는 자국 자본가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돈을 대 주는 구실을 더 적극적으로 맡으려 했다.

미국 사회에는 계급 간 분노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진정한 적인 자본가 계급을 지목할 수 없다. 그들이 바로 그 자본가 계급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11월 5일 화요일에 본대로다. 트럼프의 권력층 반대 형세, 반이민 사상이 선거판을 휩쓸었다.

토머스 포스터

출처 Thomas Foster, 'Economic crisis, the Democrats and US election' (2024. 11. 6) / 번역 김동욱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트럼프의 당선은
‘규칙 기반 질서’의 종말을 뜻하는가?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은 전 세계에 충격파를 일으켰다. 그 파장은 특히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블록에 집중됐다. 주로 서유럽과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과 긴밀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89년 스탈린주의 체제의 붕괴를 두고 “역사의 종언”을 선언해 유명세를 탔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경쟁 체제들을 물리치고 승자로 등극했다는 것이다. 이제 후쿠야마는 “미국 유권자들이 자유주의를 확고하게 거부했다”고 한탄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주도 전후 질서 붕괴의 징후다.” 그 신문은 한 미국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했다. “모두에게 정말 악재다. ... 아무도 승자가 아니다. 아마도 푸틴만 빼고.”

이들은 오늘날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고 불리는 것이 저무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사실 그 질서는 1945년 이후 미국이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자신의 하위 파트너로 삼고, 자신의 지도하에 결집시켜 세계를 지배하려고 구축한 것이다. 그 질서의 규칙은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나토 등의 기구들이 세웠다.

그러나 미국은 자신에게 그 규칙이 구속력을 갖는다고 단 한 번도 여긴 적이 없다. 예컨대 2002년 미국 국회는 미군 인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력을 동원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속칭 “헤이그 침공법”이다.[국제형사재판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기 때문이다. —역자]

분열

그럼에도 이 “규칙 기반 질서”가 지난 20년 동안 분열된 것도 사실이다. 근본 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이 잇달아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7~2009년 국제 금융 위기로 타격을 입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패배를 겪었다. 그리고 중국이 만만찮은 “동급 경쟁자”로 등장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는 이런 변화에 대한 대응이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을



제국주의적 이합집산의 일환 2019년 G20 정상회의에서 악수하는 푸틴과 트럼프

제시했다. 트럼프의 방법은 관세(“사전에 등재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이용하고, 자신이 보기에 미국을 등쳐 먹고 있는 국가들(동맹국이든 적성국이든)에게서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동맹국들 사이에서 일으킨 패닉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트럼프의 정책을 상당 부분 계승하기도 했다. 대(對)중국 정책의 경우가 가장 분명했는데, 바이든은 트럼프가 일으킨 무역 전쟁을 더 확대했다.

비교적 덜 알려진 사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관계이다. 1990년대에 WTO가 설립된 목적은 트럼프가 옹호하는 것과 같은 보호무역을 후퇴시키는 것이었다. 처음에 미국은 WTO의 역할을 가장 적극적으로 고치시킨 국가였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WTO 상소기구 위원 임명을 거부해 왔다. 상소기구의 결정이 미국의 주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물론 여전히 바이든은 러시아를 상대로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벌이기 위해 동맹국들을 나토로 결집시켰다. ‘북대서양 조약 기구’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나토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 작전을 조율하는 데에도 갈수록 동원되고 있다.

트럼프는 나토의 유용성에 회의를 제기해서 악명을 떨쳤다. 게다가 트럼프는 러시아가 현재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그냥 러시아가 차지하게 두는 합의를 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이미 푸틴과 통화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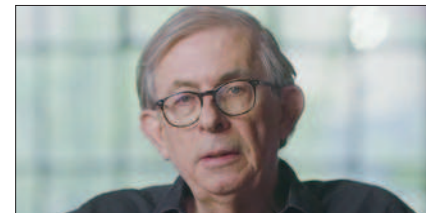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적 제국주의가 공세를 펴고 있는 다른 두 전선 — 중동과 동아시아 — 에서 트럼프가 무엇을 할지는 훨씬 불투명하다. 트럼프는 이란과 중국 모두에 호전적이다. 그러나 국제 정치를 일련의 “거래”로 취급한다는 트럼프의 접근법은 중국 정부와의 거래라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유럽연합은 트럼프에게 두려워할 게 많다. 트럼프는 관세를 20퍼센트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 경제학자는 이것이 전 세계에 “거시적 쇼크”를 줄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한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스>의 평일 뉴스레터 ‘언헤지드’에 실린 논평은 흥미로운 지적을 한다. “트럼프는 시장으로 자신의 성과를 측정하려 한다. ... 시장의 적대가 지속되면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는 아직 모른다. 트럼프는 겁을 먹고 경제의 기존 통례를 따를지도 모른다.”

이런 온갖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경제적 · 지정학적 분열을 가속시킬 것이다. 국가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책략을 펴고, 흥정을 하며, 득을 챙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트럼프가 강화시키고자 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을 더 약화시킬 것이다.

번역 이원웅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우 04710)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63-1 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46

성차별 정서 덕분에 트럼프가 승리했나?

미국의 친민주당 페미니스트들은 남성우월주의자들과 '나악한 자매들'이 어우러져 카멀라 해리스가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라 베이츠**는 성차별주의는 훨씬 더 모순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는 여성들의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트럼프 1기 정부의 몇몇 징벌적인 임신중지 제약 조치가 다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신중지권을 반대하는 트럼프의 역겨운 친구들은 트럼프의 지휘 아래 전국적 수준에서 임신중지 제약이 강화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성차별주의적 증오의 물결을 타고 낙승을 거둔 것일까? 이런 설명은 확실히 그럴듯해 보인다. 트럼프의 개인적 이력을 보면 그가 특별히 끔찍한 여성 혐오자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유죄 판결을 받은 강간범이자 상습적으로 여성을 추행한 인물이며 뺑속까지 성차별주의자다. 그는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도로 후퇴시키려 하고, 자신의 딸이 얼마나 성적으로 매력적인지 얘기한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활동위원회는 해리스를 “누구나 아는 C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칭하는 광고를 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Communist)”를 뜻했을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었던 것 같다.[여성 비하하는 단어 Cunt라고 널리 받아들여진다.]

트럼프는 선거 유세 집회를 이용해 낸시 펠로시, 카멀라 해리스, 리즈 체니 같은 여성 정적들에게 여성 혐오적 욕설을 퍼부었다.

트럼프의 유세에서 군중은 해리스의 이름이 언급될 때 “나쁜 년”이라고 외쳐댔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 JD 밴스는 해리스를 가리켜 “자식을 갖지 않고 고양이 키우는 여성”이라고 조롱했다. 그럼에도 최소한 7300만 명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그리고 여성 투표자의 44퍼센트가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할 인물로 택했다.

민주당의 오판

해리스는 조 바이든이 2020년에 얻은 것보다 여성 표를 훨씬 적게 얻었다. 여성들은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에 투표한다고 삶이 나아질 거라고 믿지 않았다.

선거 직후에 해리스를 변호하는 자들은 해리스의 패배가 그의 정책 때문



2017년 미국 전역에서 열린 트럼프에 반대하는 여성 시위

이 아니라 그가 여성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만들어 내느라 분주했다.

재외 민주당 당원 모임 대변인인 샤론 마니타는 이렇게 주장했다. “여성이 존중받지 못하고 여성을 깨어 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 문화에 따라 투표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같은 여성에게 투표하거나, 심지어 임신중지권이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투표 요인이라고 본 것은 민주당의 오판이었다. 민주당은 여성들이 자신의 더 넓은 정치적 신념을 위해 그리고 계급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투표할 가능성은 보지 않았다.

자유주의 언론은 트럼프를 지지한 여성들을 “캐런”이라고 부르며 매도했다. “캐런”은 백인 특권층 여성을 모욕하는 말이다. 그리고 낙담한 민주당 칼럼니스트들은 패배의 책임을 트럼프 지지 여성들에게 돌리고, 훈계하듯이 그들을 “나악한 자매들”이라고 불렀다.

트럼프의 승리로 여성의 진짜 역할이 집 안에서 밥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역겨운 여성차별주의자들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직장에 다니고, 공과금을 내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평등을 기대하는 여성들도 트럼프를 지지했다. 성차별이 미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고, 의심할 바 없이 트럼프의 역겨운 캠페인에 영향을 줬고,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국을 제압하기에 충분히 강한 남성 지도자가 되겠다고 행세했다. 그는 여성 혐오를 이용해, 힘을 잃은 남성들이 자신이 강하다고 느끼게 했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여성의 40퍼

센트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그 여성들은 다른 여성에 비해 인종차별적, 성차별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그러나 그들 또한 남성 유권자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성장과 치안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사람들은 모순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일부 여성들은 페미니즘이 “과도”했다는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요구한다.

어떤 여성들은 “젠더 광신자”라는 허구적 위협에서 전통적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데 수긍하면서도 집 밖에서 일하며 적절한 보수와 노동조건 개선을 원한다.

임신중지권 확대에 투표

해리스의 패배를 두고 미국이 너무 성차별적이라 여성 대통령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너무 조야하다. 이는 임신중지권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투표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났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같은 날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면서도 그랬다.

임신중지법에 대한 주민투표가 열 개 주에서 실시됐다. 2022년 공화당이 장악한 대법원은 임신중지법이 전국 수준이 아닌 지역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주민투표를 실시한 10개 주 중 7개의 주에서 판결에 근거해 인정되던 임신중지권이 법으로 [더 강력하게] 보장되거나 전보다 개선됐다. 여성이 선택할 권리를 지키고자 했던 활동가들이 몇몇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미주리주에서는 약 52퍼센트의 지지

로, 임신중지를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 하던 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임신 전 기간에 걸쳐 법적 제한 없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생겼다. 콜로라도주에서는 62퍼센트가 투표해 임신중지를 택한 여성에게 재정 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뉴욕주에서도 약 62퍼센트의 지지로, 그 누구도 “성적 지향을 포함한 성별,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 임신, 재생산 의료서비스” 때문에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명시한 법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법은 뉴욕주에서 임신중지권을 현재 수준보다 더 강화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부 좌절도 있었다. 네브래스카주 유권자들은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권을 확대하자는 제안을 부결시키며 임신 12주 후의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유지하기로 했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약 60퍼센트의 지지로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임신중지 시술을 중범죄로 규정할 조치가 유지됐다.

임신중지권에 찬성하는 다수파가 가장 큰 패배를 겪은 곳은 플로리다주다. 활동가들은 임신 24주까지 임신중지를 보장하는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싸웠다. 현재로서는 임신 약 6주까지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다.

이 운동은 57퍼센트의 지지를 얻으며 명백한 다수를 이뤘지만 그 정책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60퍼센트가 필요했다.

공화당의 강경 우파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는 법적 협박, 경찰의 위협,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배정된 주 자금을 이용해서 승리를 거뒀다.

해리스는 임신중지권을 대선을 좌우할 쟁점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지지하면서도 번영에 대한 트럼프의 거짓된 약속에 투표했다.

미국 재생산권 활동가들은 임신중지권을 위한 투쟁이 기본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보육, 교육, 주거를 위한 싸움과 연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스는 이런 싸움을 주도하기를 거부했다.

진지한 선거 분석이라면 계급 문제와 결합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가게 예산을 여성이 관리하고 있고, 그들은 치솟는 생계비와 하락하는 임금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

▶ 5면으로 이어짐

트럼프노믹스, 무슨 계획일까?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 선언 후 24시간도 안 돼서 세계 10대 부자의 부가 640억 달러(약 90조 원) 늘었다. 트럼프 임기가 시작하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트럼프와 트럼프가 장악한 의회가 내년에 기업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리라는 기대에 미국 주식시장 주가가 역대급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감세는 기업의 수익을 크게 늘려 줄 것이다.

2022년 9월 당시 영국 총리 리즈 트러스가 자금 조달 대책 없이 대폭 감세를 약속했을 때에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파운드화를 팔아 치워 영국 연금금이 파산할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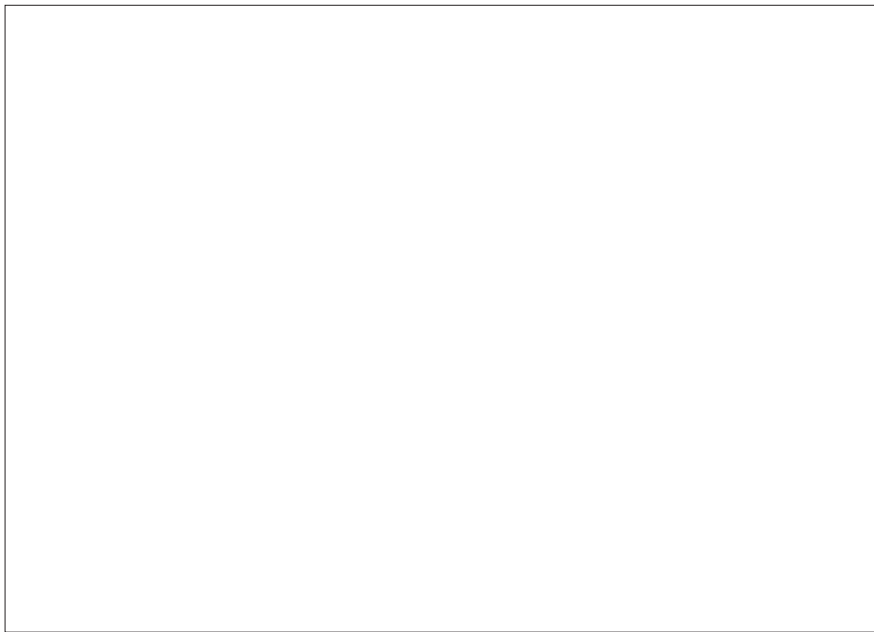
미국은 경우가 다르다. 국제 무역과 결제망의 막대한 부분이 달러화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달러화는 기축 통화 지위를 갖고 있고 국제 금융 시장의 요동으로부터 미국 정부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

달러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브릭스 국가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을 기반으로 달러화와 경쟁하는 국제 결제 통화를 신설하려는 계속된 시도에서 온다. 현재 여러 중동 산유국이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화와 대등하게 겨루는 수준에 근접이라도 하기에는 아직 한참 멀었다. 세계 결제에서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3퍼센트도 안 된다.

한편, 연방 정부의 부채가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다. 현재 미국 연방 정부 부채는 35조 달러가 넘는데, 이는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 최저였던 1974년의 네 배에 이른다.

하지만 이런 부채 규모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경제 성장이 탄탄하게 계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노동계급 사람들의 삶에 먹구름을 몰고 오고 있다

속된다면 세수가 증대할 것이고, 금리가 비교적 낮게 유지된다면 이자 부담도 견잡을 수 없이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저금리라는 조건이 충족될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채권 수익률(채권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금리)은 트럼프 당선 이후 이미 올랐고, 인플레이션이 재개되면 더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예측할 만한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

관세

트럼프가 공약한 경제 정책에서 감세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고율의 수입 관세다. 트럼프의 주요 경제 고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국역: 《자유무역이라는 환상》(마르코폴로)]에서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보호무역주의 장벽으로 미국을 둘러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러 수입 품목에 20퍼센트 이상의 관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얘기가 떠들썩하게 나온다. 이 관세는 미국이 현재 적대적 경쟁국으로 간주하는 중국만이 아니라, 유럽·캐나다·멕시코에서 수입된 상품들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멕시코산 자동차에 500퍼센트 관세를 매기자는 제안도 있다.

관세는 수입 상품 가격을 높이고 미국산 상품의 가격 인하 압력을 낮출 것이다. 수입 상품을 대체할 미국산 상품이 있다면 말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도 공약했다. 트럼프는 연준이 물가 상승과 부채 증대에 겹먹고 금리를 올려 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연준에 대한 통제 강화는 금융시장을 훨씬 더 겁에 질리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든 안 되든 트럼프는 완강한 정치적 반발에 부딪힐 공산이 크다.

관세는 세계 무역과 세계경제 성장도 둔화시킬 것이다. 특히 관세가 보복성 무역 전쟁을 촉발하면 더욱 그럴 것이다. 미국은 경제 규모 덕분에 세계 나머지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의 영향을 영국처럼 국제 무역에 더 의존적인 나라들보다 덜 받는다.

트럼프노믹스의 보호무역주의는 영국과 유럽에 대체로 악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 무역 둔화는 미국 경제 성장에도 반작용할 것이다.

트럼프의 정책 전반에는 물가 상승을 촉발할 또 다른 요소가 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수많은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추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이주민들은 초착취,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는 취약한 처지에 있다.

이들을 노동 시장에서 제거하면 미국 경제가 최대 7퍼센트 위축되고 임금·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확실치 않다. 의회와, 중국에 사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극단적인 부분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종기로는, 수많은 미등록 이주민을 추방한다는 악랄한 계획이 현실성 없는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는 극적인 경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상·하 양원은 트럼프를 위해 그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예측은, 경제가 심하게 요동칠 것이고 그중 좋은 변화는 하나도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이 썩어 빠진 체제 전체에 대한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롭 호브먼

출처 Rob Hoveman, 'Trumponomics: What's the plan?' (2024. 11. 11) / 번역 김준호

▶ 4면에서 이어짐

고 있다. 여성은 남성만큼이나 노동계급의 일부이며 같은 중압감에 시달리고 비슷한 희망과 꿈을 품고 있다.

진정한 질문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다. 〈아틀란틱〉잡지의 소치를 곤잘레스는 2016년 트럼프 취임식 맞이 시위가 여성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해리스에게 투표한 남성들에게 상냥하게 대하는 “부드러운 일상 생활의 외교”를 펼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런 비판주의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2017년의 전 세계적 “여성 행진”을 재현하는 것이 훌륭한 출발이 될 것이다. 당시 5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와 그 정권의 여성 혐오에 맞서 함께 행진했다.

당시의 운동으로 등장한 단체는 이번 선거에서 악필 등으로 신원 확인이 안 된 우편 투표자에게 다시 투표하라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다.

이것은 틀린 방향이다. 더 많은 대중 저항이 필요하고 선거 과정에는 덜 집

중해야 한다. 특히 지금처럼 확실한 패배 후에는 더 그렇다.

우리는 자기 목숨이 걸린 것처럼 항의하고, 파업하고, 맞서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중 일부에게는 실제로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기사는 같은 필자의 기사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했지만 다수가 임신중지권 강화에 투표하다'(온라인 기사)를 원용했다.

출처 Sarah Bates, 'Did sexism hand Trump victory?' (2024. 11. 10) / 번역 김재현

ws.or.kr

더 많은 기사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경제 혼란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는 독재자 엘시시
- ★ 미국의 중동 개입의 역사
- ★ 중국은 정말 제국주의 국가가 아닐까?
- ★ 독자편지 대기업 이윤을 위한 윤석열의 의료개혁, 의료 불평등 심화시킬 것
- ★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 3인에 대한 검찰 송치 규탄한다

트럼프가 재임하면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바뀔까?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돌아가면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2018년처럼 김정은을 만나 한반도 상황이 호전되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기대한다. 실제로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김정은과 다시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육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향후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 군비 통제에 합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2018~2019년 북·미 정상 외교는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끝났다.

물론 이 실패를 존 볼턴 같은 미국의 기성 외교·안보 인사들의 훼방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얼마 전 트럼프의 장남이자 최측근인 트럼프 주니어는 “네오콘과 매파”를 트럼프 2기 내각에 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향후 북·미 대화가 하노이 때와는 다를 수 있다고 기대를 거는 이들이 있다.

진짜 다를까? 트럼프 1기 당시의 북·미 관계를 돌아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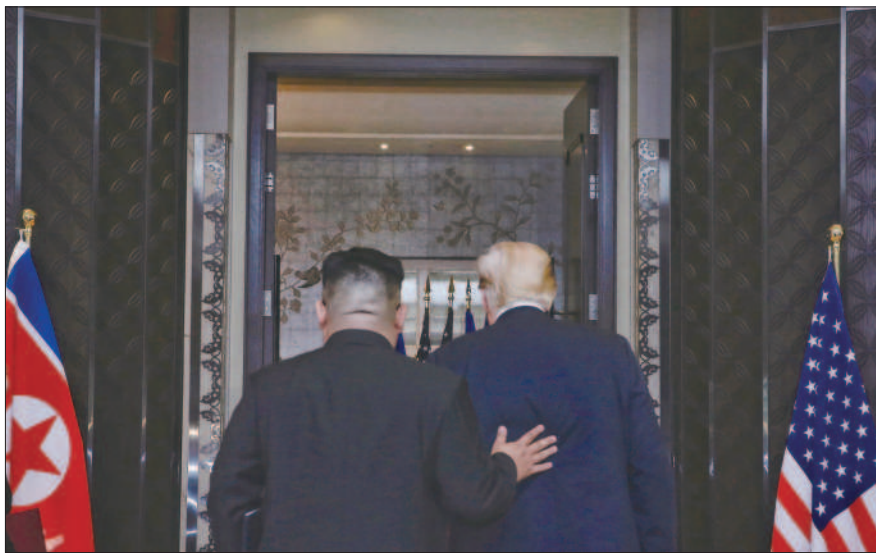
2017년 트럼프 집권 전까지 오바마 등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흔히 미사여구에 그칠지라도 강대국들의 협력으로 유지되는 국제 질서를 지키겠다고 말해 왔다. 그렇지만 그 국제 질서에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런데 트럼프는 미국의 쇠락하는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다. 그러한 국수주의적 발언으로 극우지지층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했다.

트럼프가 대중국 적대를 본격화하자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쟁투는 전보다 격화되고 있었다.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긴장이 고조됐다.

이때 북핵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전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배경으로 했다. 오바마는 북한 ‘위협’을 자국의 전략을 동아시아에서 관철시킬 수단으로 삼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이는) 국제 대북 제재로 북한을 압박했다. 오바마의 이런 ‘악의적 무시’에 반발하며 북한은 오바마 정부 마지막 2년 동안 잇따라 핵실험을 감행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 능력을 급격히 키웠다.

그래서 트럼프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려 했다. 그렇지만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은 기대를 모았지만, 회담 후 양측의 동상이몽이 금세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그도 문제의 해법을 확실히 보여 주지는 못했다.

2017년 내내 트럼프는 북한을 위협하는 말을 쏟아 냈다. 그해 9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는 “북한을 철저히 파괴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일부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이른바 ‘코피’ 작전을 구상했다.

열병식 현장을 타격하려 한 트럼프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허버트 맥매스터가 올해 낸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가 회의 중에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 하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반도 전쟁은 미국에도 부담스런 선택이었다. 전쟁이 벌어지면 한국과 일본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고, 무엇보다 자칫 중국과의 직접 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2017년 위기 와중에 어느 한쪽의 오판이나 우연한 계기로 돌발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를 일이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특종 보도했던 언론인 밥 우드워드는 당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기도하러 성당에 자주 갔다고 썼다. 트럼프의 명령이 “너무 충동적”이어서 매티스의 근심이 컸다는 것이다.

위기를 관리할 필요가 점차 커졌고, 이듬해 봄이 돼서야 상황이 바뀌었다.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부상을

억제하려고 이란과의 핵협정을 파기하려고 하는 등 중동의 화급한 문제들을 우선 처리해야 하는 처지였다.

6월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이목이 쏠렸다.

그렇게 정상회담은 열렸지만,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없었다. “싱가포르 성명에는 … 그 어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도 담기지 않았다.”(시그프리드 헤커의 《핵의 변곡점》(창비))

이는 트럼프의 선택이었다. 당시 트럼프는 북한에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입버릇처럼 자랑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더는 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하에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시키는 것, 특히 중국의 도전을 제압하는 것과 긴밀히 연동돼야 했다. 이 점에서 북핵 문제는 일본·한국 같은 동맹국들을 미국에 더 밀착시키는 데에 유용한 쟁점이었다.

테이블 바깥의 이런 상황이 북·미 대화를 지배했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지속했고 심지어 대북 제재도 강화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보낸 친서를 기자들 앞에서 흔들며 종종 자랑했다. 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오간 친서들을 분석한 한 전문가는 이렇게 밝혔다.

“대부분의 편지에서 트럼프의 초점은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무를 상기시키는 데에 가 있었다. 트럼프는 양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자기 쪽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핵의 변곡점》)

그래서 김정은은 트럼프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점차 불만을 드러냈다.

양측의 이견과 긴장은 결국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 회담의 실패로 이어졌다.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턴은 훗날 회고록에서 자신이 그 회담을 망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를 과시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밥 우드워드에게 회담 결렬이 자신의 의지였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미 영변 핵시설 포기 의사를 밝힌 김정은에게 핵시설 5곳을 추가로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미 일방적으로 양보해 온 북한 측이 그 제안을 수용하지 않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회담 결렬을 직접 통보했다.

볼턴 등의 제안을 받아들인 셈이었지만, 북한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양보를 강요하며 회담을 파탄 낸 사람은 트럼프 자신이었다.

김정은은 커다란 굴욕을 느끼며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후 북·미 대화는 더는 진전되지 못했다.

트럼프가 앞으로 북한을 상대로 어떤 선택을 할지 정확히 예견하기는 어렵다. 머지않은 미래에 그가 김정은을 다시 만날 가능성은 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미국 국가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그 나름으로) 확고하게 추구할 것은 분명하다.

이 점에서 그에게 북한은 대외 정책상 우선순위가 아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전쟁들을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선인 중국과의 대결이 있다.

북한도 2018년보다는 트럼프에게 신중하게 접근할 공산이 크다. 얼마 전 북한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무기 양산 능력을 과시했다. 그동안 북한의 핵 능력이 더 고도화된 데다가,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도 다져 놨다.

따라서 북·미 관계 문제는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고차 방정식이 돼 있다.

트럼프하에서 한반도에 일시적인 긴장 이완은 있을지라도, 대만해협이나 남중국해 불안정 등 제국주의 간 쟁투의 다른 발화점들과 맞물리면 불안정은 오히려 더 증대할 공산이 크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투쟁 정당하다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하라

김문성

2주 연속으로 주말에 반윤석열 시위들이 대규모로 벌어졌다.

11월 9일 세종대로 일대에서는 반윤석열 집회 4개가 열렸는데, 참가 인원을 더하면 약 20만 명 정도다.

민주노총, 진보당, 촛불행동, 민주당 등 각각 집회의 핵심 구성원은 달랐다. 그러나 대체로 노동자 등 서민층이었다.

그중 가장 컸던 것은 민주노총 중심으로 모인 윤석열 퇴진 총궐기 대회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자들의 생계비 위기가 계속 심각해져 왔다. 특히 고물가·고금리로 실질임금이 하락했다. 노동자들이 대거 행동으로 나서지는 않아도 불만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간만에 전국 집중 동원을 한 민주노총 조합원 수만 명과 민주노총의 대규모 퇴진 집회에 고무돼 나온 비조합원 참가자 수만 명이 모여, 승례문부터 서울광장 더플라자 호텔 앞까지 전 차선과 인도를 꽉 메웠다.

삼단봉

경찰은 집회 규모가 커져서 시위 참가자들이 허가된 장소를 넘어서자 두



윤석열이 큰 정치적 위기에 처하자 경찰은 반윤석열 운동 탄압을 늘리고 있다

번이나 집회 대열을 공격했다.

“경찰은 2만여 명이 동원됐고, 특수진압복·방패·삼단봉으로 집회 참가자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골절과 호흡곤란, 염좌와 찰과상 등을 입은 부상자가 속출했다.”(민주노총 성명)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경찰 폭력으로 갈비뼈가 부러졌다.

11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과잉 진압 아니냐는 질책에 경찰청장 조지호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고 강변했다.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났

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에 따르면, 애초에 경찰이 집회 신고를 충분히 넓게 받아주지 않았다.

참가 인원이 늘어서 장소가 사람으로 넘치면, 안전을 위해서라도 집회 장소를 추가로 확보해 줄 일이지, 펜스를 쳐서 집회 참가를 아예 막거나 집회 장소안으로 사람들을 옥여넣을 일인가?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개신교 우파의 동성애 반대 연합 예배 때는 차도에 사람이 넘친다며 인도를 내 주고 행인들

의 인도 통행을 막아 집회 참가자들을 배려했다. 경찰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경찰은 현장에서 난데없이 대열을 가로막거나 밀어붙이며 폭력을 휘둘러 십수 명을 다치게 만들더니, 11명을 연행해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 모두 건설노조 조합원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은 민주노총 집행부 7인에 대한 내사(입건 전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이 집회에서 교활하게 충돌을 유발하고 탄압을 개시한 것은, 윤석열 퇴진(탄핵) 집회가 더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폭력 시위 이미지를 씌워 팬한 공포와 우려를 조성해 일반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 집회에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여 온 촛불행동도 수사 탄압을 받고 있는데, 퇴진 운동 본격화를 선언한 민주노총 집행부도 수사 대상이 됐다. 민주노총은 11월 20일과 12월 7일에 2, 3차 총궐기 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4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모두 풀려나고 민주노총 수사는 중단돼야 한다.

지지율 추락에도 윤석열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11월 11일 검찰은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11월 9일 윤석열 퇴진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이 딱 임기 절반 만에 커다란 정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정권에 불리한 인물들에게 동시에 칼날을 들이민 것이다.

2주 전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중앙일보》 의뢰)를 보면, 윤석열이 임기 내 잘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74퍼센트가 “없다”고 답했고, 앞으로 대통령 직무를 잘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9퍼센트가 “잘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 3분의 2가 앞으로 윤석열이 달라질 거라는 기대도 없는 것이다.

이런 지지율 추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등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11월 12일 사설에서 이렇게 썼다. “김 여사 문제”(19%)가 부정평가의 1순위였지만, ‘경제·민생·물가’(11%)에 대한 불만도 높았다. 지난 4월 총선 전후 여론조사에선 ‘경제·민생·물가’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 1위였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11월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지율 눈치 보지 않고 현재의 기조를 밀어붙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현 정부가 대중의 생계비 고통을 심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개혁에 대한 (기득권적) 저항”이라고 강변한 것은 한 번 물어 보자고 선전포고한 것이다. 윤석열은 우파 결집으로 위기를

헤쳐 나가려 한다.

여권은 일단 내분을 봉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반정부 집회들이 연이어 벌어진 11월 9일에 전광훈의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우익 집회도 수만 명 규모로 크게 열렸다. 이 집회 핵심 구호는 “이재명 구속”이었다.

이재명 재판

11월 15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100만 명 무죄 탄원서를 조직하자, 여권은 아예 재판 생중계를 촉구하고 있다. 둘 다 재판부에 공개적인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토론회에서 사실관계가 조금 부정확한 말을 했다는 사소한 혐의로, 국회 다수당 대표이자 직전 선거

에서 1600만여 표를 얻은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로 판결하긴 힘들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대선 토론회에서 윤석열도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건과 학력·경력 위조 건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물론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대장동 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건 등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은 이를 이용해 민주당과 이재명의 정치적 신뢰를 훼손시켜, 반윤석열 여론을 희석시키려 하지만 최근의 지지율 추락은 그조차 쉽지 않게 만들고 있다.

사실상 정치 재판인데, 여권이 법원을 압박할 힘이 달리는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에게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했다가 자칫 정치 불안정이 훨씬 더 심해질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악몽이 된 ‘아메리칸 드림’과 트럼프의 귀환

2020년에 조 바이든은 대선에서 승리한 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역사의 “일시적 이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크게 이긴 것을 보면 그것이 틀린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그토록 큰 표차로 이겼다는 사실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퇴락하고 있는지 선명하게 드러냈다. 그런 퇴락과 민주당의 실패 탓에 트럼프와 극우가 성장하고 사회를 우경화시키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40년 넘게 이어지면서 미국 사회는 트라우마와 공포, 폭력이 가득한 사회가 됐다. 미국은 “자유세계”의 지도자를 자처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자살률, 감옥 수감자 수, 총기 관련 폭력, 마약으로 인한 사망률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추진한 자유 시장 정책들은 노동계급의 임금을 억눌렀고, 양질의 일자리를 파괴했고,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다.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소득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상위 0.1퍼센트가 소유한 부는 하위 90퍼센트의 것과 맞먹는다.

이런 경제 통계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2022년 미국에서는 4만 95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은 수치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4.3명으로 1941년 이래 가장 높았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는 14.7명으로 더 높아졌다.

고통

마약 중독 문제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마약 오용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 명당 18.75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세계 평균은 2.08명이다. 대형 제약회사가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부추긴 결과로 빚어진 마약류 중독 대유행 사태로 2021년 4월까지 1년 동안 10만 300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존스타운시(市)의 주민들은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안다. 원래 존스타운에는 베슬리햄 철강 회사의



러스트 벨트의 현실은 미국 자본주의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제철소들이 수십 년 동안 우뚝 솟아 있었다. 베슬리햄 철강 회사는 한때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다.

그러나 1992년에 문을 닫으면서 수천 개에 달했던 철강 일자리는 오늘날 거의 다 사라졌다. 이제 존스타운의 메인스트리트를 가득 채운 것은 전자담배 가게, 패스트푸드 식당 그리고 폐업한 가게들이다.

존스타운은 미국의 쇠락을 상징하고 “트럼프 나라”의 아성을 이루는 여러 도시 중 하나일 뿐이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결과로 누적된 분노와 울분을 능숙하게 이용해 왔다.

“조 바이든 같은 직업 정치인들이 당신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바이든은 당신을 부당하게 대우했고, 당신과 당신의 꿈을 짓밟았고,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중국과 세계 도처 먼 곳으로 외주화했다.” 트럼프가 존스타운 시민들에게 한 말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그 자신이 억만장자이고 상당한 대기업의 지원을 받는 작자로, 노동계급에 속하는 사람들(백인이든 흑인이든 라틴계이든)에게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신자유주의 중도의 위기가 좌파가 아닌 극우의 성장을 불러왔을까?

첫째, 트럼프는 신자유주의 중도가

야기한 위기를 이용하면서도 동시에 신자유주의 중도의 사상을 활용한다. 그간 정치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시장 경쟁과 적자생존의 개인주의가 인간 번영의 기초라는 자유주의 이념을 설파해 왔다.

미국 작가 애덤 코츠코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에서 “우리는 강요된 선택에 직면한다. 그런 상황은 사회적 문제의 책임을 겹보기에 개인의 잘못된 결정 탓으로 떠넘기는 구실을 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미국의 사회적 위기가 심각할 때 그 해법으로 집단적이고 계급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더 우익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책임 전가

권력층 정치인들이 자신이 망쳐 놓은 결과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인종차별을 부추긴 탓에 트럼프 같은 자가 부상할 여건이 마련됐다. 예컨대, 카멀라 해리스는 바이든 집권기에 “트럼프가 떠났을 때보다 미등록 이주민과 불법 이주민 수가 적었다” 하고 자랑했다. 해리스는 트럼프가 미국-멕시코 장벽을 “약 2퍼센트”만 지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둘째, 트럼프와 극우는 “아메리칸드

림”이라는 향수를 자극한다. “아메리칸 드림”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수십 년을 가리키곤 한다. 그 시기는 완전 고용과 생활 수준 향상, 경제 호황과 함께 미국의 세계 패권이 정점에 달한 때였다. 그러나 그 시기는 흑인과 여성, 성소수자에게는 언제나 악몽 같은 시기였다.

1950년대는 남부 주들에서 악명 높은 짐 크로법과 흑백 인종 분리, 린치가 맹위를 떨치던 시대다. 또한 “핵가족”을 미화하며 특히 여성에게 엄격한 젠더 역할을 요구하던 시대였다.

아메리칸드림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백인 미국인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권리, 즉 “생득권”이었다.

많은 노동계급 사람들이 투쟁의 성과로 1950년대에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실제로 쟁취했다. 1936~1937년 미시간 플린트에서 있었던 제너럴모터스 점거 파업 같은 노동자들의 전투성 때문에 미국 지배계급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 반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와 일부 대기업들은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타협했다. 동시에 1940~1950년대 “반공주의” 마녀사냥을 벌여 좌파를 분쇄했고 그 여파는 한 세대 동안 이어졌다. 번영이 “타고난 권리”라는 생각이 대중 의식 속에 깊이



사진 출처 Luis Feliz Leon / Labor Notes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여 준 보잉 파업

자리잡았다.

트럼프는 뉴욕의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했던 악명 높은 연설에서 인종 차별과 성차별을 쏟아 냈다. 그 연설은 극우의 주요 수법을 보여 주기도 했는데, 수백만 명에게 고통을 안기는 사회적 위기를 거론하며 해리스가 “4년도 안 되는 기간에 … 우리 중산층을 산산조각 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사람들이 겪은 큰 아픔을 이주민을 향해 반감으로 비틀었다.

“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일자리를 보호할 것이다.” 뒤이어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국경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우리의 위대한 가족을 보호할 것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에서 살아갈 생득권을 보호하겠다.”

아메리칸드림에서 말하는 ‘생득권’이라는 개념은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인종 차별과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런 인종 차별은 노동자와 빈민 사이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구실을 한다.

1965년 흑인 평등권 운동 활동가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말했다. “남부의 귀족들은 가난한 백인들에게 짐 크로를 줬다.

“그의 굶주린 배가 음식을 요구하지만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 음식을 장만할 수 없을 때 그는 짐 크로를 먹는다. [영어로 ‘크로’는 까마귀라는 뜻도 있다] 이 심리학적인 새를 먹으면서 그는 자신이 아무리 누추할지라도 적어도 백인이고 따라서 흑인보다는 낫다고 느낀다.”

이 또한 트럼프의 전략 중 일부이다.

트럼프는 사람들의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리려고 인종차별을 부추기고, 이주민을 희생양 삼고, “진보 엘리트”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 결과, 트럼프 자신이 속한 진정한 엘리트(억만장자, 사장, 은행가들)들은 분노와 관심 대상에서 비껴간다.

4년 전, 트럼프는 존스타운 유세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공장을 다시 불러들일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지키지 않은 거짓 약속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지지를 잃지 않았다.

트럼프는 범죄, 마약상, 이주민, “정치적으로 올바른 좌파(위크)”를 비난하면서 사람들의 자존감과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희망

미국의 위기로 우파가 성장하는 것은 필연이 아니다. 강력한 사회 운동이 미국 사회를 뒤흔든 바 있다. 예컨대, 대학 캠퍼스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지난 트럼프 정권하에서 벌어진 각종 대규모 반대 운동이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니 샌더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OC)와 “스쿼드” 등 민주사회주의자들을 자처한 이들에게 기대를 품었다.

그들은 노동계급 사람들을 위해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바이든의 “발전적 재건” 프로그램에서 그 약속은 축소됐다.

이후 바이드노믹스는 사실상 군비 증

강 프로그램이 됐고 녹색 일자리는 눈곱만큼 만들었다. 그런데도 샌더스와 AOC 등은 바이든을 옹호하고 민주당을 통해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는 정치를 고수했다. 그들은, 위기를 심화시키고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거의 하는 것이 없는 바이든 정부를 계속 편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의 메시지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MAGA)”였다. 민주당은 “미국”이 이미 위대하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민주당의 득표는 2020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한다. 트럼프의 인종차별 부추기기에 맞서려면 민주당에 기대지 않고 거리와 작업장 투쟁을 중시하는 좌파가 필요하다.

최근 보잉 파업과 항만 파업에서 그런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고, 트럼프가 추진할 각종 사안마다 계급적 전투가 크

게 일어날 것이다. 좌파는 극우와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울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진정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의 위대한 흑인 시인이었던 랭스턴 휴스는 1930년대에, 허구적인 미국 과거의 향수를 부추기는 사람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미국은 결코 내게 미국이었던 적이 없다.”

휴스는 진정한 과제가 “다시 미국을 만드는 것”, 즉 착취와 억압의 폐해에서 벗어난 다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갱단에 의한 죽음이 초래하는 고통과 황폐함, 강탈과 횡령, 음모와 거짓에서 벗어나” 민중은 이 나라와 그 방대한 부를 “되찾아야 한다.”

오직 극우와의 투쟁, 그리고 그런 극우를 낳는 이 체제와의 투쟁을 통해서만 이를 이룰 수 있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출처 Tomáš Tengely-Evans, ‘Trump and the American Nightmare’ (2024. 11. 8) / 번역 김중환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트럼프 재선으로 무엇이 바뀔까?

일시 11월 13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트럼프 재선으로 무엇이 바뀔까?

일시 11월 1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흥사단 3층 강당 (해화역 1, 2번 출구 사이)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 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경기/인천

트럼프 재선으로 무엇이 바뀔까?

일시 11월 20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신도림역 2층 기온 대회요일 (신도림역 1호선 지상층 개찰구 앞 4~6번 출구 방향)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인천 지역 모임들 문의 010-6224-2157 / kyongi@ws.or.kr

울산/부산

트럼프 재선으로 무엇이 바뀔까?

일시 11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울산 비플라운지 (중구 성남동 94-12, 3층)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울산/부산 지역 모임들 문의 010-3328-9853 / busan-ulsan@ws.or.kr

독일

극우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연정이 붕괴하다

11월 6일 수요일 독일 연립정부가 붕괴했다. 이는 중도 정치 쇠락의 또다른 징후이고 주류 우파와 극우에게는 호재다.

개혁주의 정당인 독일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자유 시장주의자들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의 연정이 붕괴하는 것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한 지 몇 시간 만에 전해졌다.

세 정당의 인기는 독일에서 급격한 경기 후퇴가 계속되면서 추락해 왔다.

지난주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 기업인 폭스바겐은 영업 이익이 60퍼센트 하락했다면서 숙련 노동자 수천 명이 일하는 주요 공장 세 곳을 닫겠다고 발표했다.

다른 독일 대기업들도 비슷한 발표를 했다.

3년 전만 해도 상황은 사뭇 달라 보였다. 2021년에 선출된 이 연정은 오랫동안 이어진 혹독한 긴축 정책에 제동을 걸 듯 보였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환경 친화적 고임금 첨단 기술 경제를 약속했다.

그 정당들은 경제 성장으로 새 주택을 짓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 그들이 얻은 표는 정부를 구성하기에 모자랐다. 그래서 '작

독일 중도(좌/우) 정당들의 배신이 극우의 부상을 초래하다

은 국가'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당인 자유민주당을 연정에 끌어들이야 했다.

그러자 자유민주당은 연정 유지를 볼모 삼아 자신보다 큰 연정 파트너들을 쥐고 흔들었다. 자유민주당은 재무장관이라는 정부의 핵심 직책을 차지하고 정부 부채를 일정한 한도 이상으로 늘리지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연정 '파트너들'은 시작부터 서로 충돌하고 있었다. 정부의 예산은 은행가도 노동자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 예산은 지출을 삭감하고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싶어 하는 보수주의자들에

게는 너무 방만했지만, 미미한 생활 수준 개선 공약조차 실현하기에는 부족했다.

둘째, 독일 경제는 성장하기는커녕 침체에서 후퇴로 접어들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독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고작 0.2퍼센트에 불과했다.

팬데믹 이후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 노동자, 연금이나 복지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사민당 지지율이 추락한 것이 놀랍지 않다.

지난 9월 지방선거에서 사민당은 자신의 "아성"인 브란덴부르크주의 정부를, 나치가 이끄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게 거의 빼앗길 뻔했다.

주류 우파인 기독교민주당·기독교사회당 연합이 이 정치 위기의 일차적 수혜를 입을 공산이 크다.

연정이 붕괴한 다음 날 기민·기사 연합은 이듬해 1월에 조기 총선을 열 것을 요구했다. 부유층도 그 요구에 맞장구쳤다. 도이체뱅크 최고경영자 크리스티안 제빙은 어영부영 몇 달을 보내다가 "성장을 잃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겁을 줬다.

"독일은 거대한 경제적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다."

여론조사에서 기민당·기사당 지지율은 32퍼센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나치도 조기 총선 전망에 입맛을 다시고 있다. 현재 AfD는 전국 지지율이 약 18퍼센트로, 사민당의 지지율인 16퍼센트보다 높다.

나치는 지난가를 지방선거에서 거둔 성공으로 크게 고무돼 있다. 독일의 정치에서 벌어지는 일은 어마어마한 파장을 낳을 것이다.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대응이 더없이 시급하다.

유리 프라사드

출처 Yuri Prasad, 'German coalition collapses as far right surges' (2024. 11. 7) / 번역 김준호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무기 수출 규제 실효성 의문이다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주요 방산 물자를 수출하지 못하게 한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의 취지가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 반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에 적용될 수 있다.

11월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무기 수출을 중심으로"에서 발제자인 임재성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은 이 개정안과 민주당의 당론 채택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토론회는 참여연대와 이재정·한정에 등 민주당 의원 4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것이었다.

민주당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기 수출 절차 자체는 전보다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허점이 있다. "주요 방산 물자"가 무엇인지를 대통령이 정하게 한 것이다. 즉, 대통령이 "주요" 물자가 아니라고 정하기만 하면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 된다. 임 실행위원은 6일 토론회에서 이 점을 수정 보완해 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구심이 든다. 방위사업법은 무기 수출만 규제할 뿐, '안보' 정책적 지원(양도·대여 등 사실상 무상)은 규제하지 않는다. 임 실행위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후자로 규제하려면 군수품관리

법 개정안 또한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런 허점을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민주당은 한국 기업들의 이익을 중시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자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친제국주의 정당이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이기도 한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문제에서 일관된 반대 세력이 될 수 없다.

일관성

지금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시도를 비판하고 있지만, 2022년 문재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비살상용)를 보내어 서방 제국주의를 지원해 줬다.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대해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1년이 훌쩍 지나도록 입을 꼭 다물고 있다.(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그러니 설령 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회 동의 절차가 신설된다고 해서 그것에 기대어 무기 수출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음에도 한국군 해외 파병이 부결된 적이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2000년대 초 이라크 전쟁 파병 반대 운동 때 여당이었던 노무현의 정당 열린우리당은 파병안 찬성 당론을 채택했고, 파병에 끝까지 반대한 그 당의 의원들은 소수였다.

김승주

현대중공업 노사 잠정합의안 부결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 인상을 바란다

현대중공업 노사 임금·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전체 조합원 6648명 중 6130명이 투표해(92.2퍼센트) 59.7퍼센트(3658명)가 반대했다. 잠정합의안이 기본급 인상 수준 등에서 조합원들의 염원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노조 집행부는 올해 기본급 15만 원 이상 인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해 당선했다. 이는 고물가·고금리 등 심각한 생계비 고통을 해소하고, 지난 불황기에 빼앗긴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바람이 표출된 결과였다.

또, 현 집행부가 투쟁을 강조한 좌파였던 만큼 아래로부터 저항을 잘 조직해 사용자측에 맞서리라는 기대도 반영됐었다.

그러나 이번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면, 기본급 월 12만 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3만 5000원 포함)과 격려금 450만 원 지급, 명절 귀향비 각 20만 원 인상 등 지난해 합의 수준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최근 조선업 업황은 계속 개선되고 있다. 사용자측 발표에 따르면, 선별 수주를 하고 있음에도 올해 3분기 만에 연간 수주 계획의 97퍼센트를 달성했고, 영업이익도 6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을 피부로 느낀다. 공장은 거의 풀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은 조선업 불황기에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길 바란다. 11월 6일 파업 집회

가동 중이다. 그럼에도 물량을 소화하지 못해 납기 지연을 걱정하는 경영진의 목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세계 조선업 상황이 불안정하다며 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려 한다. 현재 업황이 초호황기 수준은 아니고 현대중공업 주력 선종 중 하나인 컨테이너선 신규 발주가 줄어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2000년대 조선업이 호황기일 때도 사용자측은 어려울 때를 대비하자며 임금 인상엔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노조 집행부는 사용자측의 강경한 태도에 맞서 8월 말부터 투쟁을 조직했다. 두 달 반 동안 3~4시간 파업을 포함해 24차례 파업을 진행했고, 특히 10월부터는 투쟁 수위를 올려 생산에 차질을 입혔다.

호황기

그러자 사용자측은 구사대를 대거 동원해 폭력을 사용하며 생산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수십 명이 다쳤고 구사대의 폭

력을 제지하던 노조 사무국장은 코뼈가 부러졌다.

선진 노동자들은 노조 집행부에 파업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 부담 증가를 감안해 사용자측을 더욱 압박하는 투쟁 전술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파업 참가자를 늘리기 위한 기층 활동을 강화하고 생산 차질을 극대화하는 등 투쟁 수위를 더욱 올려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데 지난주에 노조 지부장이 사장과 독대한 직후 실망스러운 잠정합의안이 나왔다. 임금 손실에도 24차례 파업을 한 노동자들로선 지난해 기본급 인상액보다 2000원 높은 수준은 만족할 수가 없었다.

지난해 1차 잠정합의안 부결을 (68.8퍼센트)보다 낮지만, 60퍼센트에 이르는 부결율은 많은 노동자들이 더 싸운다면 더 나은 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을 보여 준다.

노조 집행부는 이 같은 조합원들의 염원을 받아서 즉각 투쟁 조직에 나서야 한다.

사용자측은 줄곧 지난해 인상액 수준 이상은 어렵다고 버텼지만, 노동자들의 압력에 밀려 일부 양보를 해야 했다.

따라서 지금은 교섭이 아니라 더 강력한 투쟁 조직에 무게중심을 뒀야 한다. 파업 참가 인원을 더 늘리고, 투쟁 수위를 높여 파업 효과를 키워야 한다.

권준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대의원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싸우겠다고 외친 교사들

10월 24일 인천의 초등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던 한 특수교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교사는 법 규정을 훨씬 뛰어넘는 수의 학생을 배정받아 과도한 업무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여러 차례 교육청에 “살려 달라”며 지원을 요청했으나 실질적인 지원은 전혀 없었다.

11월 8일 근무를 마친 교사들이 고인이 된 인천 특수교사를 추모하고 투쟁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인천교육청 앞으로 모여들었다.

7개 교원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인천교사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추모 문화제에

무려 2000명 가까이 참가했다.

지난 5일 인천교육청 본관 연좌 농성에 참가한 300여 명보다도 훨씬 많이 모여, 주최 측이 준비한 팻말이 너무 모자랄 정도였다. 기간제 특수교사가 속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에서도 위원장과 인천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또, 집회장 양 옆으로 교육 당국을 규탄하는 현수막 수십 개가 걸렸다.

공약 이행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집회 주최 측에 보낸 답변서에서 진상 규명과 순직 처리, 인천의 과밀 학급 해소,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교사들은 현장이 실제로 바뀔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 교육감으로 알려진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이미 2년 전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지만, 약속은 이행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인천만의 문제도 아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 시도별 과밀 특수학급 비율’을 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4년 기준 11만 5610명으로, 2020년의 9만 5000여 명보다 21퍼센트나 증가했다. 그러나 특수교사 총원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전국 과밀 특수학급 수는 2022년 1499학급(8.8퍼센트), 2023년 1766학급(9.9퍼센트), 2024년 1822학급(10.1퍼센트)으로 계속 늘었다.

인천 특수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번 투쟁은 현장 교사들의 분노와 투지가 굉장히 높다는 점을 보여 준다. 특히 특수교사들에게서는 동료를 잃은 슬픔과 애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 위기에 빠진 지금, 연대를 더 확대하고 투쟁을 키운다면 성과를 낼 수 있다.

고인의 순직 인정과 전국의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교사들이 투쟁에 나설 뿐 아니라, 특수교사·특수학급 부족으로 고통받는 학생·학부모들과 연대한다면 투쟁의 파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조수진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소속 학교 교사, 전교조 조합원

극우파들의 전략이 일부 바뀌고 있다

주디 콕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부터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인도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이탈리아 총리 조르자 멜로니까지 극우가 기세를 높이고 있다.

극우에 맞서 싸우려면 그들 내부의 서로 다른 역학 관계를 이해해야 한다.

여러 가지 역학이 작용하고 있다. 첫째, 일부 세력은 고전적인 파시즘 전략을 취한다.

고전적 파시즘 전략은 거리 운동을 조직해 반대파와 소수자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궁극적으로는 독재를 수립해 노동계급 조직과 민주주의 일체를 파괴하려는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자들로는 토미 로빈슨이 있고, 지난여름 영국 곳곳에서 벌어진 폭동이나 2018년 독일 동부 켐니츠를 휩쓸고 간 폭력배들도 이런 조류에 속한다.

둘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연합(RN)이나 멜로니의 이탈리아 형제당처럼 선거에 초점을 두는 정당들이 있다. 이들의 중핵에는 강경 파시스트들이 있지만, 자신의 파시즘 이데올로기를 감춰서 더 폭넓은 유권자층을 끌어들이려 한다.

셋째, 파시즘 이데올로기에 기반하지 않은 극우 정당들이 있다. 영국의 나이절 퍼라지와 영국개혁당 같은 당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퍼라지는 극우 수사를 구사하지만, 나치식 세계관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거나 거리 운동을 조직하거나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려는 야망은 없다.

넷째, 전통적인 보수 정당들이 갈수록 극우화하고 있다.

몇 년 전 영국 보수당 내무장관 수엘라 브래버먼이 극우 음모론인 '대전환(인종 대교체) 이론'[유럽이 무슬림 등 이민자로 대체될 것이라는 음모론]을 들먹이며 이민자들을 공격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들 넷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지만, 이 넷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키운다.

극우화

주류 정치인들은 생계를 꾸리기 힘든 서민들에게 내놓을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점점 더 인종차별적 발언과



유럽의 파시스트 등 극우가 지난달 한데 모여 세를 과시했다 네덜란드 헤르트 빌더르스, 이탈리아 마테오 살비니,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등

극우적 연사를 써가며 일자리와 주택, 공공 서비스가 부족한 책임을 난민과 이민자에게 뒤집어씌운다.

하지만 주류 정치인들이 인종차별을 용인한다고 해서 극우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오히려 극우를 더 키워줄 뿐이다.

보수당 정치인들이 이민자의 “침공”,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비방하며] “증오 행진”, [인종에 따른] 이중 잣대 치안을 들먹일 때마다 영국개혁당 같은 정당의 인종차별 사상, 이민자 혐오 사상이 정당성을 얻게 된다.

실제로 영국개혁당은 7월 4일 총선에서 400만 표 이상 득표했다.

3주 뒤인 7월 27일에 파시스트 토미 로빈슨이 런던 거리에 1만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모았고, 불과 며칠 뒤 잉글랜드 전역에서 인종차별적 폭동이 터져

나왔다.

사회가 힘들 때면 파시스트와 극우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력이 자신들뿐이라고 자처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 방향으로만 작용하는 과정이 아니다. 극우가 성장하면서 주류 정치를 끌어당길 수도 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 당권 주자들이 모두 영국개혁당으로 빠져나간 유권자들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쓰며 보수당을 더욱 우경화시키려 한다.

키어 스타머의 노동당도 결코 무죄가 아니다. 노동당 정부는 ‘긴축 정책 2.0’을 약속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천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하며 이민자를 향한 인종차별을 부추긴다.

극우는 기회주의적으로 지배계급이 공격하는 대상을 자양분 삼아 세를 불린다.

여러 극우는 저마다 싫어하는 대상과 추구하는 정책이 다르다. 트럼프의 공화당은 자유 시장을 옹호하고 국가의 복지 시스템을 해체하려 한다.

반면 긴축에 반대하고 복지 지원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극우도 있다. 물론 이민자 가정은 그 복지의 대상에서 열외지만 말이다.

헝가리 극우 지도자 오르반 빅토르의 동맹당은 유대계 금융자본가 조지 소로스를 거둬 공격하면서 노골적인 유대인 혐오를 드러낸다.

하지만 오르반은 이렇게 유대인을 혐오하면서도 유럽에서 이스라엘과는 가

장 친하게 지내는 자이기도 하다.

멜로니는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하는 반면, 오르반과 르펜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하자고 주장한다.

유럽의 여러 극우 정당이 유럽연합을 비판하지만, 일부는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런 모순은 파시즘·극우가 자본주의와 맺는 관계에서 일정 부분 비롯한다. 이들은 “권력층 반대” 아웃사이드를 자처하고 때로는 “반자본주의” 수사도 동원하지만, 실제로는 현상 유지를 지한다.

그래서 극우 파시스트들은 집권하고 나면 대개 대기업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집권 전보다 더 조심한다.

예컨대 멜로니는 총리가 되기 전 이탈리아에 시장 자유화 개혁을 요구하던 유럽연합을 공격했다. 하지만 총리가 되자 유럽연합의 지원금을 받는 대가로 유럽연합 비판을 재빨리 거둬들였다.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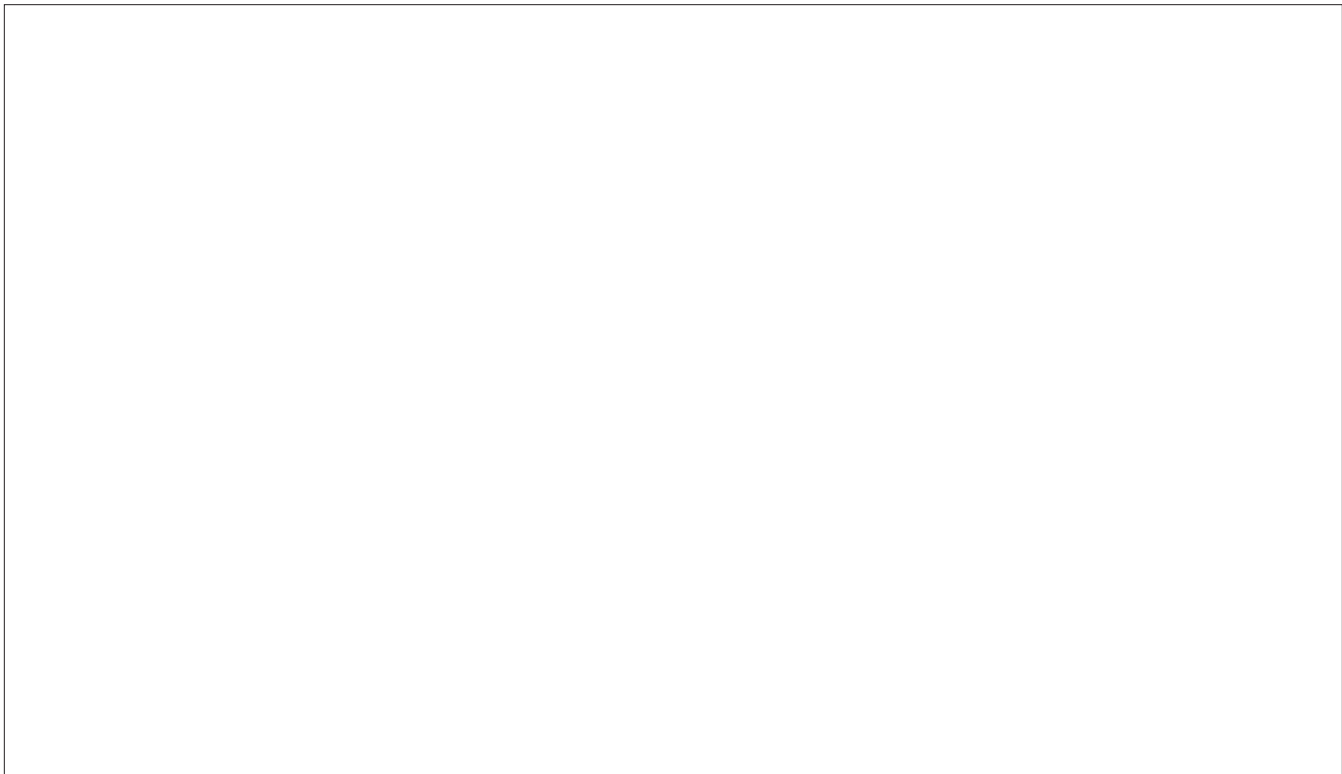
이들은 정치뿐 아니라 조직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트럼프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지 않았다. 그 대신 150년 넘게 존재해 온 공화당을 장악한 뒤 그당을 재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기성 정치 기구를 넘어설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트럼프는 대안 우파 인터넷 전사들과

지난여름 영국의 극우 폭동에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거리 동원으로 맞선 것은 극우의 목소리가 결코 다수가 아님을 보여 줬다 우리의 과제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다



7월 극우의 (난민 공격) 폭동은 이슬람 혐오라는 신종 인종차별을 더욱 자극했다

손잡았고, 극우 언론 ‘브라이트바트’의 스티브 배넌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임명했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승리를 도둑 맞았다고 우기면서 파시스트들이 국회 의사당을 습격하도록 부추겼다.

트럼프는 반대파들을 체계적으로 위협하고 괴롭힌다. 그가 공격을 하면 우익 인플루언서들이 노골적인 폭력 위협을 더하며 공격을 키운다.

유럽에서 극우 조직들은 수십 년에 걸쳐 변화해 왔다.

프랑스 국민연합의 전신인 국민전선(FN)은 나치 추종자들과 홀로코스트 부정론자들이 만든 당이었다.

하지만 당 대표가 된 마린 르펜은 조직의 “악마성”을 지우려 애써 왔다.

예를 들어 국민연합은, 이전에는 여성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인정한다.

국민연합은 청년층을 끌어들이려고 학생 대상 세금 혜택을 공약하기도 한다.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도 파시스트 전통을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포스트파시즘” 정당을 표방한다.

파시스트의 상징과 구호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인정하는 당의 발언과 공존한다.

하지만 이렇게 겉모습을 바꿨다고 해서 이들 정당이 파시즘과 결별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그들이 거리 운동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이중 전략

1930년대 파시스트 운동도 이중 전략을 썼다.

1930년대에도 파시스트들은 선거 기반도 만들었고 준군사적 거리 전투 조직도 만들었다. 이탈리아에는 검은셔츠단이 있었고, 독일에는 갈색 셔츠를 입은 돌격대원들이 있었다.

현재 르펜과 멜로니가 거리의 군대를 훈련시키고 있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사회적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들도 거리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우파 포퓰리즘이 먼저 등장했다. 이는 정치를 우경화시키며 2010년대 마테오 살비니의 동맹당이 성공할 토대를 마련했다.

이후 이는 다시 멜로니의 이탈리아형제당에게 길을 열어 줬다. 극우화가 지금보다 더 나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험성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변천 과정에서도 볼 수 있다.

AfD는 파시스트, 인종차별주의자, EU 회의론자들이 연합해 2013년에 창당했다. 하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파시스트들이 당을 장악했다.

한때 홀로코스트 관련 발언 때문에 당의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비외른 회케가 지금은 당의 방향을 좌지우지한다. 회케는 AfD 튀링겐주 대표인데, 튀링겐주에서는 지난달 주 선거에서 AfD가 돌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AfD 국회의원들은 노골적 나치 약 100명을 보좌진으로 고용하고 있다.

AfD는 파시스트들이 어떻게 선거 정치와 거리 운동을 결합할 수 있는지 보여 준다.

독일 동부 소도시 선거에서 AfD는 40~50퍼센트를 득표했다.

이곳에서는 주로 청년들이 나치 조직을 만들어 무슬림과 성소수자, 좌파를 공격한다.

영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영국개혁당은 최근에 얻은 지지를 대중적 극우 정당 건설

에 이용하려 한다.

영국개혁당은 당내 구조를 바꿔 지역 지부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당이 대중에 더 깊이 뿌리내리고 강성 활동가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는 위험한 신호다. 이런 변화로 파시스트들에게 문을 열어줘, 파시스트들이 영국개혁당 안에 조직을 만들고 당을 더 극우화시킬 수 있다.

로빈슨이 지난 7월 극우 집회에서 영국개혁당에 투표했느냐고 물었을 때 참가자들은 모두 손을 들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위협은 엄청나지만, 극우가 결코 막을 수 없는 세력은 아니다. 지난여름 영국에서 일어난 폭동에 인종차별 반대 운동이 거리 동원으로 맞선 것은 극우가 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우리의 과제는 파시스트들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대한의 단결에 기반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대규모 시위를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극우라는 위협을 만들어내는 체제와도 맞서 싸워야 한다.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파시스트당이 “반혁명적 절망의 정당”이라고 역설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사회주의자들이 파시즘에 맞선 공동전선을 만들면서도 파시즘을 낳는 자본주의 체제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혁명적 희망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Judy Cox,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far right’ (2024. 10. 22) / 번역 김동욱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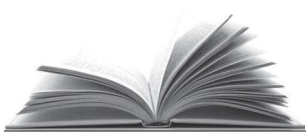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엠코리아 현재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체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46



서평 |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184쪽, 9,000원

이스라엘 국가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는 명저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얼마 전 작고한 유대계 사회주의자 존 로즈가 1986년에 쓴 《강탈국가 이스라엘》(책갈피)은 이 질문에 답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저작의 하나다.

이 책의 열정적이고 의분을 자아내는 메시지는 한 세대의 사회주의자들이 중동에서의 미국 주도 제국주의 질서를 들춰내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 출간 후 거의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로즈가 개괄한 제국주의 체제의 기본 역학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책은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의 유명한 1951년 기사를 인용하며 시작한다. “이스라엘은 경비견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영국의 바람을 대놓고 거스르면서 아랍 국가들을 적대하는 정책을 펼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지 마시라.

“반면, 어떤 이유에서든 서방 열강이 모르는 체하기를 선호하는 때가 오면, 이스라엘은 정도를 넘어선 결례를 서방에 범한 이웃 국가들을 응징하는 일을 들킴직하게 말할 수 있다.”

무자비하고 확산에 찬 서방 이익의 수호자가 되겠다는 이스라엘의 제안은 이르면 1950년대에 이미 상당히 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은 전환점이었다. 이스라엘군은 일련의 전격전으로 이집트·시리아 군대에 굴욕을 안겼다.

미국 지배계급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 전까지도 꾸준히 제공하던 무기·경제 원조를 막대한 규모로 늘렸다.

로즈가 지적했듯 이런 총애의 근저에 깔린 동기는 이스라엘 지배계급의 시온주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중동의 석유가 세계경제에서 갖는 결정적



포악해질 대로 포악해진 경비견의 리드줄을 다시 잡게 된 전쟁광. 11·10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중요성이었다. 미국은 그 핵심 자원을 지배하기 위해 아랍 국가들에 투자해야 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랍 국가의 지배자들에게 의존해 석유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려 한 것이다.

미국의 중동 정책

로즈는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과 아랍 정권 지원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는지 명쾌하게 분석했다. 비록 각각을 위해서 사뭇 다른 수사가 동원됐지만 말이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중동 정책의 초석이라고 로즈는 지적했다. 1973년 대체로 중동 국가들로 이뤄진 산유국 카르텔인 오

펙(OPEC)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석유 수출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 지배계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미국 지배계급은 서방 경제가 일시적으로 고통을 받더라도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선호했다.

미국의 중동 지배 체제의 핵심에 있는 그 관계, 즉 미국 지배계급과 그 경비견을 자임한 이스라엘의 관계는 오늘날에도 근본에서 같다.

이스라엘에 감히 대들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내리는 “처벌”은 그 어느 때보다 야만적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고 있다.

변화한 것은 둘 사이의 상대적 세력 균

형이다. 1986년에 이스라엘 경제는 세 자릿수 물가 상승률에 시달리고, 미국의 막대한 직접 원조로 연명하는 상태였다.

오늘날에는 더는 그렇지 않다. 미국의 이스라엘 경제 원조는 점진적으로 축소돼서 20여 년 전에 종료됐다. 이스라엘은 더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제공한 막대한 보조금으로 육성된 첨단 기술 경제가 성공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군사적 지원은 또 다른 문제다. 미국은 이번 회계년도에만 110억 달러 [16조 원]가 넘는 군사 지원을 했다.

제국주의 중심부는 힘을 소진했지만 이스라엘 지배계급의 자신감은 높아져왔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미국의 지원이 필요 없다거나 주객이 전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지원하에서 이스라엘 지배계급이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킬 여지가 더 늘어났다.

이스라엘의 경비견 구실이 낡는 결과에 대한 로즈의 분석은 비극적인 방식으로 입증됐다.

정착자 사회에 둘러친 성곽 안에 갇힌 유대계 이스라엘인 대부분은 식민주의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다. 로즈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1960년대에 아랍계 알제리인들에 ‘포위돼’ 있던 프랑스인들,” “남아공에서 흑인들에게 ‘포위돼’ 있던 유럽계 백인들”의 세계관에 유비했다.

로즈는 유대인 사회주의자로서 그가 역사의 어느 편인지를 분명히 했다. 바로 팔레스타인 해방과 “경비견 국가” 이스라엘의 종말을 위해 투쟁하는 편이었다.

앤 알렉산더

출처 Anne Alexander, 'Why Israel can be relied on to back US interests' (2024. 11. 10) / 번역 김준호

초대합니다! 노동자연대 2024년 연대의 밤

🕒 2024년 12월 6일(금) 저녁 6시 ~ 11시

📍 서울 을지로 태성골뱅이신사 본점 3층

(서울 중구 을지로3길 35, 을지로입구역 1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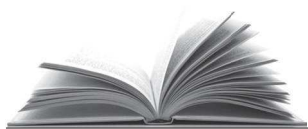
후원
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백은진)
048402-04-014849



노동자연대 ws.or.kr | 02-2271-2395 | wsorg@ws.or.kr





서평 | 《가자란 무엇인가 – 팔레스타인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집단학살의 본질》

이스라엘의 인종학살에 대한 탈식민주의 학자의 견해를 보여 주다

《가자란 무엇인가》의 저자 오카 마리는 국내에도 몇몇 저서가 번역돼 있는 일본의 저명한 아랍 문학 전문가이자 탈식민주의 학자다. 그녀는 일본 페미니스트 우에노 치즈코가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국가의 책임 문제에 미온적인 것을 비판한 것으로도 한국에 잘 알려져 있다.

《가자란 무엇인가》는 저자가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공격 약 2주 후에 열린 두 차례의 “긴급 학습회”에서 한 강연을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 전쟁이 시작된 이래 “사태의 중대성에 걸맞지 않거나 문제의 핵심을 전달하지 않는” 서방과 일본 매스미디어의 보도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정말이지 한국 매스미디어에도 딱 해당하는 비판이다.

저자는 문제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식민주의에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스라엘의 건국 과정과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를 개괄하면서, 시온주의의 본질이 인종청소를 추구하는 정착자 식민주의임을 보여 준다.

저자는 지난해 10월 7일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봉쇄된 가자지구에 거듭 가한 공격 또한 가히 인종 학살적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이런 맥락에서 저자는 10월 7일 공격을 정당한 저항권의 행사로 규정한다. 저자는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납치를 전쟁 범죄로 보지만, 그것 때문에 10월 7일 공격의 기본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또, 저자는 하마스를 민족 해방 운동 세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하마스가 이슬람주의 정당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좌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해독제라고 할 수 있는 지적이다.

이처럼 《가자란 무엇인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관해 꽤 관철은 관



저자는 하마스를 민족해방운동 세력이라고 옹계 본다

점을 제시한다.

또, 강연을 엮은 책이라 팔레스타인 문제에 낯선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하나는 현 상황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이 하는 구실을 충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전쟁을 그저 이스라엘의 일방적 학살로만 본다. 그러나 이스라엘 또한 하마스를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국제 연대 운동을 가능케 하고 중동과 국제 정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의의를 봐야 한다.(물론, 저자가 강연을 한 시점이 사태 초기이기는 했지만, 그런 점은 사태 초기부터도 어느 정도 드러났다.)

서발턴

저자가 팔레스타인인들을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연대자들의 구실은 대체로 그들을 위해서 국제법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여기에는 저자의 이론적 관점도 작용하는 듯하다. 오카 마리는 탈식민주의의 관점에서 제3세계 하위 주체(서발턴)의 경험에 관한 많은 저작을 써 왔는데, 그 출발점은 서발턴이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에 놓여 있다

는 것이다.

그런 관점은 과연 어떤 토대에서 서발턴의 저항이 가능하냐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 때문인지 그의 많은 저작들은 스스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서발턴을 대신해 표현하는 지식인의 관점에서 있다. 그리고 표상 불가능한 경험에 대한 발화 자체가 저항이라는 식으로 저항의 의미를 순치시키기도 한다.

아마도 그런 관점 때문에 이 책에서도 저자는 나크바에 관해 설명한 다음 나크바의 기억을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 내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살펴보는 듯하다.(매우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지만 말이다.) 또, 하마스와 무장 저항의 성격을 정확하게 짚으면서도 그 의의는 보지 못한 채, 가자지구 주민들이 살던 곳을 떠나지 않는 것만을 중요하게 보는 듯하다.

이 책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둘러싼 사회 세력과 물질적 이해관계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저자는 식민주의를 핵심 문제로 짚는다. 그런데 저자는 식민주의를, ‘시온주의 프로젝트를 통한 유대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발상이 나오는 “식민주의의 정신” 문제로 다루는 데 그친다. 국제적 정치·경제 시스템으로서의 제국주의 문제를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나 당시 영국 제국주의의 이해관



가자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 문제의 역사적 맥락과 집단학살의 본질

오카 마리 지음, 김상운 옮김, 두번째테제, 215쪽, 18,000원

계는 시온주의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서 불가결한 요소다.

오늘날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을 이해하는 데서도 제국주의 문제는 핵심에 있다. “친이스라엘 로비” 때문에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한다는 저자의 설명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중동 지배에서 핵심적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이런 이해관계 앞에서 국제법은 무력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맞서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2010년대 아랍 혁명에 주목해야 한다. 팔레스타인의 연속을 가능케 하는 중동 내 제국주의 네트워크에 아랍 대중이 타격을 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제3세계 피억압자들의 경험을 중요하게 다뤄 온 저자가 이 책에서 아랍 혁명 경험을 지나가듯 언급만 하는 것은, 저자가 아랍 대중의 잠재력 또한 온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그러한 격변이 다시 벌어질 조건이 무르익고 있다. 우리는 팔레스타인인들과 아랍 대중이 다시 “역사의 무대로 세차게 밀고 들어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 연대 운동도 그런 전망 속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이원웅

▶ 16면에서 이어짐

더라도 득표율 차이는 미미했을 것이다. 스타인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미시간 같은 경합주가 민주당 쪽으로 기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와는 별개로, 스타인의 득표는 미국

선거 제도하에서 제3당 후보가 돌파구를 내기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각국의 녹색당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녹색당은 집권에 가까워질수록 자본가들의 이해관계에 적응하라는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녹색당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기보다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중재하려 든다.

미국 노동계급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려면 선거적 책략에 의존할 수 없다. 기

층에서 팔레스타인인 인종 학살과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우는 조직이 필요하다.

커릴라 로일

출처 Camilla Royle, 'How anger over Palestine shaped the US election' (2024. 11. 07) / 번역 김중환



팔레스타인 문제는 미국 대선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진 것은 그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고, 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입장 때문이다.

지난 한 해 가자지구를 위해 거리로 나선 수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인과 무슬림 유권자들은 카말라 해리스가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지원하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

미시간주(州) 디어본은 미국에서 아랍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그곳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47퍼센트, 해리스는 28퍼센트, 녹색당의 질 스타인은 22퍼센트를 득표했다.

4년 전 조 바이든이 74퍼센트를 득표했던 그곳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민주당을 심판하겠다는 의지가 컸음을 보여 준다.

‘미국-이슬람 관계 협회’가 지난달 무슬림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42.3퍼센트가 스타인을 선호했고 41퍼센트는 해리스를 선호했다. 일부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에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지만, 당연히도 9.8퍼센트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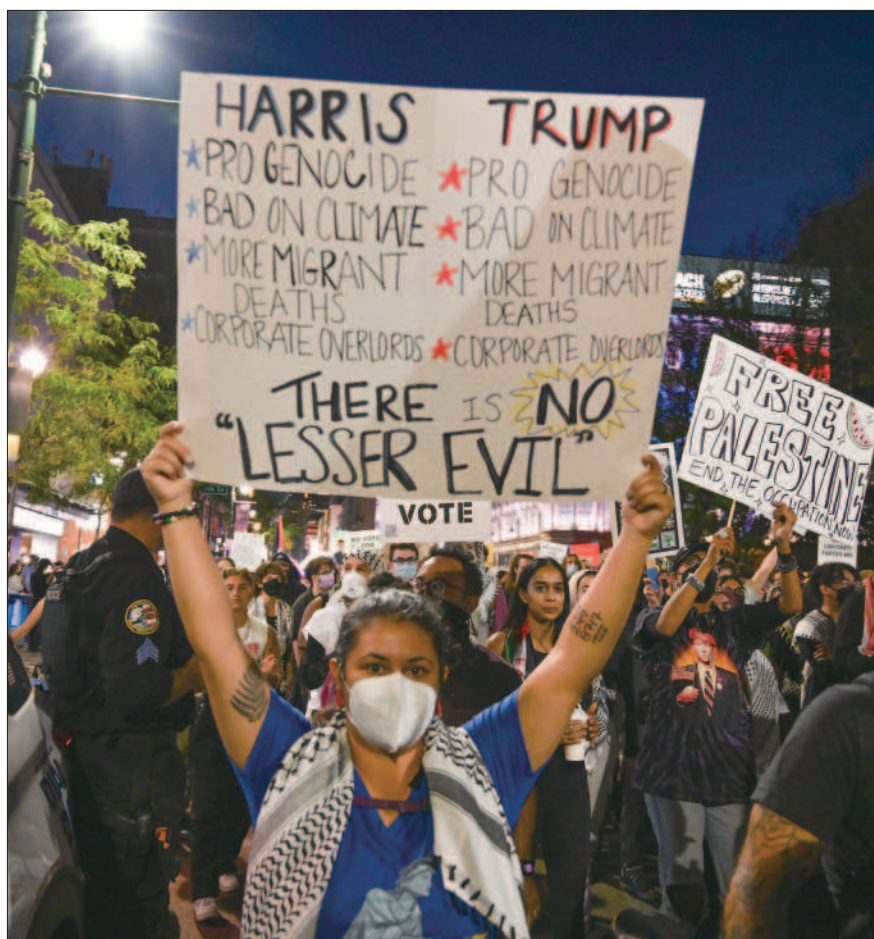
미시간에서 활동하는 팔레스타인인 활동가 라일라는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구도 폭격을 중단시키겠다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바논계 미국인 나딘 역시 비슷한 얘기를 했다. “누가 당선하든 팔레스타인 문제에서는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이스라엘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보내자는 입장입니다.”

“물론 임신중지권 문제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내 표를 얻기에는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저는 상·하원 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지만 대선만큼은 아닙니다. 트럼프는 분명 끔찍한 자이지만, 민주당이 이스라엘 문제에서 취한 입장 때문에 도저히 민주당을 찍을 수 없습니다.”

해리스는 이러한 팔레스타인 지지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선거 유세 중 시



“차악은 없다” 9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위대가 “우리는 인종 학살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끼어들자 해리스는 되레 이렇게 큰소리쳤다. “이봐요, 트럼프가 승리하길 바란다면 그렇게 하시든가요. 그런 게 아니라면, 제 말을 막지 마시죠.”

민주당은 스타인에 투표하는 것이 트럼프에 투표하는 것이라는 TV 광고를 내보내 사람들을 겁주려 했다.

“인종 학살에 투표하지 않을 것”

때때로 해리스는 유권자들을 회유하려고 자신이 전임자 조 바이든보다 덜 호전적일 것이라는 인상을 풍기기도 했다.

미시간 연설에서 해리스는 온건한 전쟁 반대 입장처럼 보이려고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가자 전쟁을 끝낼 것이다. 인질을 집으로 데려오고, 가자지구의 고통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안보를 보장하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존엄과 자유, 안전, 자결권을 누리도록 보장하겠다.”

8월에 해리스를 만난 ‘지지 후보 없

음’ 운동(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지지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지원 중단을 요구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운동)은 해리스에게서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중단을 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해리스가 무슬림과 아랍인 유권자들과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나 다음 날 국가안보보좌관 필 고든은 해리스가 무기 수출 중단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서둘러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해리스는 미시간 유세에 전 대통령 빌 클린턴도 동원했다. 그러나 클린턴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살해할 “수박에 없었다”고 발언해서 분노를 샀다.

그리고 해리스는 미국 부통령에 재임하는 내내 이스라엘의 중동 전쟁을 일체 지원해 왔다.

해리스의 계산은 친팔레스타인 표를 잃더라도 친이스라엘 표를 붙잡고, 권력자들에게 더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겨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시간에서 나온 투표 결과는

팔레스타인 지지 후보에 투표하려는 유권자층의 열망이 컸음을 보여 준다.

스타인은 이스라엘로 무기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했고 가자지구에서의 즉각 휴전을 요구했다.

지난 9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했을 때 스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불과 며칠 만에 이스라엘은 레바논인 수백 명을 무차별 폭격과 테러 공격으로 살해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인종 학살과 토지 강탈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하원의원 라시다 틀라임(디어본도 그녀의 선거구에 속한다)은 77퍼센트라는 엄청난 지지율로 이번에 4선에 성공했다.

틀라임은 이른바 ‘스퀴드,’ 즉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던 좌파적인 여성 민주당 의원 4인방의 일원이었다.

틀라임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해 해리스와 바이든 둘 다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상반기에 미국을 휩쓴 학생들의 캠퍼스 점거 운동을 지지했다.

틀라임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라는 구호를 옹호하며 그 구호는 “해방, 인권, 평화 공존의 염원을 표현한 것이지 죽음, 파괴, 증오와는 무관하다”고 옹계 주장했다.

바이든의 초대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가 미국에 왔을 때, 틀라임은 “인종 학살 유죄”라는 팻말을 들었다.

틀라임의 인상적인 득표는 민주당에 환멸을 느낀 미시간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에는 투표하지 않고 하원 의원 선거에만 투표한 것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틀라임은 민주당 내에서 극소수에 속한다. ‘스퀴드’의 나머지 3명, 아이아나 프레슬리, 일한 오마,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해리스를 지지했다.

녹색당에 투표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스타인은 0.4퍼센트를 득표했다. 이는 스타인 때문에 해리스가 질 것이라는 위험이 거뒀이었음을 보여 준다. 스타인이 받은 표가 모두 해리스에게 갔

▶ 15면으로 이어짐